

안전진단 최악 등급 도청 별관 운명은

추진단 “어떻게든 살려보겠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사업의 발목을 잡아왔던 옛 전남도청 별관 문제가 새 국면을 맞았다. 보수공사를 해도 10년 뒤면 붕괴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내려져서다. 1년 이상의 보존 논란 속에서 얻어낸 ‘부분 존치 합의’ 합의가 추진될 수 있을 지 여부, 보수·보강 방법을 도출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지 여부, 조사 결과에 대한 시·도민 대책위 등의 반발에 따른 공사 추가 지연 여부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건축기술론 영구 보존 불가능 ‘부분 존치 합의’ 원점 회귀 가능성

◇보강·보수도 할 수 없는 옛 도청 별관=(주)한국구조안전기술원은 별관에 대해 “상태평가 D등급, 안전성 평가 E등급으로 종합평가 안전등급은 E등급”이라고 밝혔다. 침하, 콘크리트의 탄산화, 철근 부식, 콘크리트와해 등으로 건축물의 상태에도 문제가 있지만, 과도한 증축과 그로 인해 재료의 강도가 낮아졌다는 것이 그 이유다. 따라서 원상회복을 할 수 있는 보수방법, 구조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보강방안을 찾을 수 없다.

이에 따라 1년 이상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사의 발목을 잡아왔던 ‘보존 논란’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이번 ‘존치 불가능’이라는 안전진단 결과로 인해 난산 끝에 도출된 ‘부분 존치’도 기술적으로 어렵게 됐다. 현재까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하 추진단)은 문광부와 광주의 합의를 존중해 최대한 부분 존치 방안을 끝까지 찾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추진단 관계자는 “조사결과를 기술적인 부분이며,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는 전문가와 지역 여론을 수렴하면서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보존 자체가 어려운 건물에 거액의 예산을 투자해 부분 보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회의적인 의견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옛 도청 별관은 지난 1950년 조적조(벽돌을 쌓아 지은 구조) 2층 건물로 준공된 뒤 1950~1980년대 걸쳐 철근 콘크리트구조, 가건물인 경량패널 구조 등이 더해져 4~5층 건물로 증축된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다. 또 건물을 사용하면서 증축 공사를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하중을 견디지 못해 철근 등이 노출되면 이를 페인트 도장 등으로 ‘뺨질 처방’한 것도 건물의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했다. 조사 책임자인 이강일 구조기술사는 “건물 우측이 최대 9.2cm 기울어져 허용기준을 1.5배 초과하고 있으며, 건물 곳곳에 철근 부식도 최대 29% 정도가 진행돼 녹이 슬어 부슬부슬한 정도”라며 “보수·보강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비용도 산정할 수 없으며, 부분 존치를 할 수 있는 수준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지리지못한 논란 재점화되나=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은 광주시에 7개 권역에 오는 2023년까지 5조3천억원이 투입되며, 이 중 문화전당사업비는 7천894억원이다. 애초 문화전당은 오는 2012년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옛 도청 별관 보존 논란으로 공사가 1년 이상 중단되면서 완공은 2년 늦춰진 2014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공사가 늦어지면서 지난해 300억 원의 예산이 올해로 이월됐으며, 올해 예산도 5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삭감됐다.

◇부분 존치할 수 있나=지난해 9월 별관 철거를 전제로 한 문화전당 설계 원안을 고수하던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박광태 광주시장 지역 국회의원 등으로 구성된 ‘옛 도청 별관 문제 해결을 위한 10인 대책위원회’의 간곡한 요청을 받아들여 별관 철거방향을 철회, 부분 존치를 합

의했다. 이에 따라 1년 이상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사의 발목을 잡아왔던 ‘보존 논란’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이번 ‘존치 불가능’이라는 안전진단 결과로 인해 난산 끝에 도출된 ‘부분 존치’도 기술적으로 어렵게 됐다. 현재까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하 추진단)은 문광부와 광주의 합의를 존중해 최대한 부분 존치 방안을 끝까지 찾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추진단 관계자는 “조사결과를 기술적인 부분이며,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는 전문가와 지역 여론을 수렴하면서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보존 자체가 어려운 건물에 거액의 예산을 투자해 부분 보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회의적인 의견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옛 전남도청 별관 내 심하게 균열이 간 벽돌로 쌓은 기둥. 안전진단 결과 별관 곳곳에 균열과 콘크리트 해체 등이 계속돼 건물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지경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는 등 보존을 주장해왔던 단체도 명확하게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결정할 것”이라며 “여기서 더 논란이 계속된다면 공사 완공시기 가 더 미뤄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최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전당의 새 세 계안을 작성하겠다”고 말했다. 시·도

민 대책위는 이번 안전진단 결과와 관련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7일 안전진단 보고회에 참석한 대책위 관계자들은 “안전진단 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전남 野 공동후보 나오나

정세균 대표 ‘야권 지방선거 연대’ 제시

‘공동 지방정부’ 성사면 선거관도 흔들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7일 ‘6·2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야권의 통합과 연대를 통한 공동 지방정부 구성, 시민배심원제 도입 등을 통한 공천혁신, 생활정치 실현 등을 제시함에 따라 지방선거 관도에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야권과의 선거 연대, 시민배심원제 도입 등은 호남지역 지방선거 관도에도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어 지역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동 지방정부 구성=민주당이 야권의 공동 지방정부 구성 방안을 제시한 것은 선거 공조는 물론 향후 지방정부를 공동 운영함으로써 여권에 비해 열악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확대하려는 의미도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공동 지방정부 구성의 현실화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정치권의 관측이다. 야권이 후보단일화 협상 등을 통해 특정 정당 후보가 우위에 있는 지역에 후보를 내지 않고 지지하는 선거 연합을 이룰 수 있지만 공동 지방정부 구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진영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데다 중앙당이 따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자치단체를 공동운영할 경우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야권의 선거 연합은 광주·전남지역 지방선거 구도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당장, 민주당이 광주·전남의 일부 지역구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할애해 국민참여당 등 타 정당 후보를 세울 수 있는데다 상징적인 선거 지역에 야권 공동 후보를 내세울 가능성도 없지 않은 현실이다. 실제로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광주·전남지역 선거에서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의 선거 연합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시민 배심원제 도입=정 대표가 신년 연설을 통해 시민배심원제 도입을 주장함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지방선거에 이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현재 민주당 통합과 혁신위원회가 지난 6일 지도부에 보고한 시민공천배심원제는 ‘각급 선거에 있어 최고위원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시도당의 요청이 있을 때는 최고위원회의가 해당 시도당과 협의, 실시여부를 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의 의지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모든 지방선거와 지역에 시민배심원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 당 지도부가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을 강력하게 밀어붙인다면 시도당이나 해당 지역위원회의 반발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민주당은 뉴민주당 플랜 제시를 통해 소모적인 이념논쟁은 마감하고 생활밀착형 정책대안 제시에 방점을 둘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경제, 노동, 교육, 보건·복지, 환경·에너지, 통일·외교, 안보 등 6대 분야별로 각종 정책을 2월까지 잇따라 선보일 예정이다. 정책집행력을 통한 지방선거 승리의 포석을 깔아가겠다는 것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U대회 조직위원장 누가 맡나

광주시 26일 선출... 사무차장 직급도 촉각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회 창립이 임박하면서 조직위원 총괄할 위원장직을 누가 맡을지, 그리고 조직위 사무국에 파견할 사무차장의 직급이 어떻게 조정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시는 오는 26일 U대회 조직위원회 창립총회를 열고 180명에 이르는 조직위원들의 의견을 거쳐 조직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시는 이에 따라 오는 20일을 전후해 조직위원장 인선작업을 내부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현재까지는 박광태 시장이 정부와 관계, 정계 요를 통해 적합한 인물을 물색하고 있는 과정에서 확실한 후보는 떠오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로선 조직위원장을 시장이나 외부인사가 단독으로 맡게 될지, 아니면 시장과 외부인사가 공동으로 맡게 될지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만일 외부인사를 영입한다면 하계유니버시아드를 총지휘해야 하는 만큼 명망 있는 인물이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U대회 조직위 사무국에 파견할 사무차장의 직급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듭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사무차장 직급을 2급으로 해달라는 광주시의 요청에 대해 행정부는 “조직위원회 사무차장에 2급을 준 전례가 없다”

며 3급을 받아들일 것을 종용하고 있어 직급확정이 늦어지고 있는 상태다. 7일 행정부 관계자와 만나 협의를 벌인 이기신 도시마케팅본부장은 “행안부에서는 ‘2급 사무차장은 전례가 없으며,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 사무차장도 3급’이라며 U대회조직위 사무차장도 3급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협의를 통해 행정안부와 의견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U대회조직위 사무국에는 시에서 85명, 중앙 및 유관기관에서 15명 등 1차로 100명이 별도정원으로 파견될 예정이어서 그동안 팍 막혔던 인사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광주시는 필요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선 5개 구청에서 3명씩 15명을 파견받기로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홍형기기자 redplane@

www.nanomtech.co.kr
대표번호 1577-8515

황금의 5분을 아십니까?

하루 10분만 투자하면 심장질환 예방 효과 극대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심박계
5분만에 심박수 측정 HeartPlus ACB-1000E
소용돌이치는 건강을 지켜주세요

광주비밀기술원과 공동연구개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심박계
편의추천의 사용 및 휴대성을 개선

nanom
나노엠 테크놀로지